

# 일제강점기 관립 중앙시험소의 도자정책 연구

엄승희\*

- I. 머리말
- II. 중앙시험소의 설립배경과 조직업무
- III. 시기별로 본 도자정책 양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관립 중앙시험소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되어 해방 무렵까지 운영된 일제강점기의 유일한 공업 연구·조사기관이었다. 특히 이 기관은 공업의 범주에 공예 관련 산업을 포함시켜 이 분야의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목적은 물론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중앙시험소의 운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기관의 존립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개발을 기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적인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당시 조선의 상·공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테마인 중앙시험소의 도자정책들도 이 시기 도자 제작 전반의 질적 개선과 제도화 실현에 다가가지만, 더불어 불합리한 운영체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음을 확인할

---

\* 숙명여대·이화여대 강사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 개항 이후 시기는 논의의 대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시기 연구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sup>1</sup> 窯址 발굴 및 관련 展示의 성과가 병행되는 가운데 관심이 고조되었다.<sup>2</sup>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중앙시험소는 근대기 최고의 기술개발센터로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sup>3</sup> 미술사 분야에서 시험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소 내에 개설된 부서와 연구내역 등이 한국 전통공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요업부는 설립부터 폐지까지 존속하면서 수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 도자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

<sup>1</sup> 학위논문으로는 鄭暉淳, 『韓國近代陶磁의 考察』(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송기쁨, 『韓國近代陶磁의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엄승희, 『日帝侵略期(1910-1945) 韓國 近代陶磁 研究』(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수희, 『한국 근대 백자에 보이는 일본의 영향』(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崔容準, 『1945年以後 1960年代 韓國現代陶磁研究: 大韓民國美術展覽會를 中心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정책과 제작구조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가 있으며, 관련 연구논문으로는 崔健, 『大韓帝國時代의 陶磁器』, 『오얏꽃 황실생활유물』(궁중유물전시관, 1997); 최진, 『한국 근대도에 서설』, 『한국근대미술: 공예·근대를 바라보는 눈』(국립현대미술관, 1999); 엄승희, 『일제시기 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 『한국근대미술사학』 13(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방병선, 『하재일기를 통해 본 조선말기 분원』, 『講座美術史』(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등이 있다.

<sup>2</sup> 공식적인 窯址 발굴조사는 1995년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충주 미륵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충주미륵리백자가마터』(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昌德宮仁政殿外行閣址發掘調査報告書』(文化財研究所, 1995); 『景福宮發掘圖錄—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文化財研究所, 1995); 『景福宮訓局軍營直所址』(國立中央博物館, 1996); 『景福宮泰元殿址』(文化財研究所·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西五陵發胎室』(文化財研究所, 1999); 『楊口 方山の 陶窯址—地表面調査報告書』(이화여대 박물관·양구군, 2001); 『강화 조선궁전 외규장각지 제4차발굴조사 약보고』(한림대학교·인천광역시 강화군, 2001); 『靈巖 南海神祠 出土 日本 名文白瓷』(목포대학교 박물관, 2001); 『務安 皮西里 朝鮮白磁 窯址』(목포대학교박물관·서울지방항공청, 2003); 『夫餘 羅嶺里 遺蹟』(대국관광개발(주)·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등). 이 중 충주미륵리백자가마는 발굴된 백자편과 가마구조 등에서 전통과 외래의 수용을 통해 성립된 절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이며, 이외는 발굴품 대부분이 수입자가 주종을 이룬 편이다. 한편 최근들어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동대문운동장 부지(2009)와 한얼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서대문형무소 취사장터(2010) 등지에서 일제강점기 소비유물들이 상당량 발굴되어 주목된다. 비록 유물 대부분은 이전 발굴지와 마찬가지로 왜사기와 국내의 일본인 공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발굴범위와 출토량, 출토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도자연구에 상당히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근대 도자기 전시로는 2006년 일민미술관에서 개최된 〈문화적 기억—야나기 무네키요시가 발견한 조선 그리고 일본〉전과 2009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 〈근대, 그릇을 담다〉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이외 『廣州分院里窯靑華白磁』(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94); 『오얏꽃 황실생활유물』(궁중유물전시관, 1997); 『운현궁 생활유물III』(서울역사박물관, 2006); 『한반도 근·현대도자의 향방전』(경기도자박물관, 2008)도 주목해야 할 근대 자료로 들 수 있다.

<sup>3</sup> 엄승희, 『1910년대 《매일신보》에 나타난 중앙시험소의 요업정책』,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두리미디어, 2005); 이태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변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한국과학사학회, 2009).



도 1 관립 중앙시험소 전경, 일제강점기,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도 2 남만주철도회사 부속 중앙시험소, 20세기 전반,  
『滿鐵』 p. 52

다. 식민지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식민통치기구의 정책 및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전개된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 도자연구의 양식사를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해 병행해야 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1910년대의 중앙시험소 요업부의 도자정책을 《매일신보》에 근거하여 이미 논의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일제 전 시기를 총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자산업의 주된 흐름은 물론 요업 성격의 중요한 실마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중앙시험소의 설립배경과 조직업무

### 1. 설립배경

일제강점기의 도자관련 정책들을 주도한 중앙시험소(이하 시험소로 약칭)는 1912년에 단행된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의 체제개편으로 설립이 계획되었다(도 1).<sup>4</sup> 시험소 설립을 계획한 총독부는 조선의 공업과 공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험소를 설립한다는 관제칙령을 우선 발표했다.<sup>5</sup> 더불어 《매일신보》지면을 통해서도 전습생 양성에 불과한 공업전습소를 대신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관동의 남만주철도회사 부속 관립시험장을 모본으로 설립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도 2).<sup>6</sup>

<sup>4</sup> 朝鮮總督府訓令 第2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1910. 10. 1); 朝鮮總督府訓令 第26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5. 5. 1).

<sup>5</sup> <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 官制 勅令>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一覽』(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12. 3), pp. 1-3.

<sup>6</sup> '中央試驗所の設備(社説)' 《매일신보》 1912. 9. 8; 각주 5를 재인용.

무엇보다 시험소 설립에는 만주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남만주철도회사(1905년 설립, 이하 만철로 약칭)와 부속 중앙시험소(1907년 설립)의 존립이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sup>7</sup> 즉 총독부는 식민지 지배를 단순 무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文事的 시설로 대표되는 교육, 위생, 학술 등의 구비를 강조한 만철 초대 총재 고토 심페이(後藤新平)의 식민지 경영철학에 주목한 것이다.<sup>8</sup> 특히 총독부는 문사적 시설의 핵심을 과학적 조사활동에 둔 만철의 운영방침에 착안했을 것이다. 비록 총독부가 설립한 시험소는 인적 구성과 운영 규모면에서 만철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협소했지만 ‘식산개발’ 혹은 ‘식산흥업’의 공통된 목적 하에 운영된 것만은 분명했다.

다만 만철 부속 시험소는 첨단 공업 분야의 공산품 개발에 주력한 반면,<sup>9</sup> 조선의 시험소는 원시공업과 공예 관련 분야의 개발 및 개량에 중점을 두어 연구 성향과 범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sup>10</sup> 그 중 도자산업은 근대기의 주요 산업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두 시험소 모두 장려했다.<sup>11</sup> 다종다량한 도자원료를 보유하지 못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주와 조선에 대한 원료유출정책을 통해 새로운 원료와 신제품 개발은 물론 근대기 서방 국가와 비견될 만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sup>12</sup>

## 2. 조직과 주요 업무

1912년 서울 동승동에 開所한 시험소는 소장과 전문기술연구원 10여명으로 출발했다.<sup>13</sup> 그러나 이후 점차 규모가 확장되어 1938년경에는 전문 연구진만도 112명에 달했다(표 2).<sup>14</sup> 인적 구성은 95% 이상이 일본인이었던 반면, 조선인은 강점 중반 이후 전 부서에 1명 정도 충원되는데 그쳤다. 구성의 배치를 고려하면 시험소에서 개발된 고급기술의 일본 독점은 거의 완벽했다고 볼

7 만철 부속 중앙시험소에 대해서는 池邊重熾, 『滿鐵中央試驗所を顧みる』(中日文化協會, 1931); 東京工業試驗所, 『東京工業試驗所年報』(1933); 杉田 望, 『滿鐵中央試驗所: 大陸に夢を賭け南たち』(講談社, 1990); 杉田 望, 『滿鐵中央試驗所』(徳間書店, 1995);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임성모 옮김, 『滿鐵』(산치림, 2002) 등을 참조.

8 原 覺天, 『現代アジア研究成立史論』(勁草書房, 1984), pp. 95-99; 原 覺天, 『滿鐵調査部とアジア』(世界書院, 1986), pp. 20-22.

9 杉田 望, 『滿鐵中央試驗所: 大陸に夢を賭け南たち』(講談社, 1990), p. 41.

10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一覽』(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12.3), pp. 37-39; 三山喜三郎, 『中央試驗所の施設及研究』, 『朝鮮—産業開發號』(朝鮮總督府, 1922.10), pp. 312-315.

11 梁波, 『植民地科學と滿鐵中央試驗所』, 『東瀛求索』12(2001), p. 37.

12 北村彌一郎, 『北村彌一郎窯業全集—第3卷』(大日本窯業協會, 1914), p.303; 三山喜三郎, 위의 글, pp. 312-315.

13 ‘中央試驗所設備’ 《매일신보》 1912. 9. 7.

1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概要』(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37), p. 3.

수 있다. 설립 시의 부서는 분석부, 응용화학부, 염직부, 요업부(도 3), 양조부였으며,<sup>15</sup> 이후 1915년에는 위생부, 1938년에는 공예부 등이 추가 신설되었다.<sup>16</sup>

개설 부서는 원료공급지로 개발되면서 한편으론 일본의 공업과 경합되지 않는 재래수공업에 부합되었다. 그러나 공예 관련부서의 경우 일본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무역산업으로서 개발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았다.<sup>17</sup> 특히 도자산업을 총괄 주도한 요업부는 폐지되던 1945년경까지 존속하면서 활발한 업무를 수행한 대표 부서였다.<sup>18</sup> 그것은 1915년부터 시행·보고된 연구 실적을 비롯하여, 매년 요업시험실을 증축하고 다양한 특수요 설치 및 전문 도자시험실의 확충 등 다른 부서에 비해 탁월했던 외적 규모를 통해서도 짐작된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으로 원료조사연구와 응용시험은 물론이고 도자기, 내화품, 초자, 법랑, 연와, 토관 등의 시제품 개발과 도자공예 저변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폭넓게 섭렵할 수 있었다.<sup>19</sup>

요업부의 대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업부는 원료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선 요업의 기득권 확보와 유출증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주력했다(도 4-1, 4-2). 따라서 요업부는

표 1 중앙시험소 조직 및 주요 연구 분야(1912·1938)

년도	연구원 구성	인사 구성	부서	연구 분야
1912	所長, 技師, 書記, 技手	所長(豐永眞里) 技師(일본인 3명) 書記·技手(일본인 6명)	분석부, 응용화학부, 염직부, 요업부, 양조부	도토분석 및 산지조사 도자기업 실태조사 염직, 대두 등 천연자원 조사 및 연구개발 등
1938	所長, 技師, 屬, 技手, 囑託, 雇員, 傭人	所長(山村銳吉) 技師(安東赫 외 일본인 6명) 技手(崔俊植 외 일본인 15명) 雇員(국적 미확인 87명) 屬·囑託(국적 미확인 4명)	서무과, 화학공업부, 염직부, 요업부, 공예부	수출공예품 개발 요업료 개발 토산품제조 및 판매에 관 한 연구 화학생활품 연구 등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1912·1938).

15 徳家藤榮, 「中央試驗所問題に就て」,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京城商工會議所, 1932.7), p. 28.

16 朝鮮總督府, 위의 책, pp. 1-3; 『朝鮮總督府勅令』第36號, 第65號(1912. 4. 1).

17 「第八章-産業」, 『朝鮮彙報』(1915. 9), p. 157;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한국근대공예사론』(미술문화, 2008), p. 159.

18 그 일면은 善生永助의 저술서인 『朝鮮の窯業』(朝鮮總督府, 1926, p. 10)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다.

19 「中央試驗所に工業に關する事項に付ては」, 『朝鮮商工獎勵官報』63(朝鮮商品調査研究會, 1939. 3), p. 13.



도 3 중앙시험소 요업부, 일제강점기,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도 4-1 굴취예측도, 요업부,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설립 초기부터 주요 산지를 선정한 뒤 현지에 전문 연구진들을 직파해 분석시험 및 감정 등을 면밀하게 진행했다.<sup>20</sup> 시기적으로 볼 때 조사 대상지, 품종 등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고 참여 연구원 또한 일본의 관립시험장과 대학교수진 등이 동원되어 확대되었다.<sup>21</sup>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요업부 단독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 분석부, 응용화학부 그리고 부속 지질조사소 등과의 공조 연구도 이루어졌다.<sup>22</sup> 더불어 요업부는 원료 조사 못지않게 식민경영 기초자료 수집차원에서 도자기업 실태 조사를 주도면밀하게 시행했다.<sup>23</sup>

또한 개량실지지도의 실시와 도자기공동작업장 설립에 관한 업무도 1930년대 이후 관장하게 된다.<sup>24</sup> 제조방식이나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산지에 대한 기술협력 이 업무의 주목적이었다.<sup>25</sup> 시험소는 전람회정책을 활용



도 4-2 실제 굴취현장, 요업부,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20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朝鮮總督府, 1930), pp. 1-5.

21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朝鮮總督府, 1927-1940)의 「인적 구성」참조.

22 특히 요업부는 분석부와 연계 연구를 가장 빈번하게 시행했다(三山喜三郎, 앞의 글, p. 315).

23 森勇三郎, 『朝鮮陶磁器業調査』,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第1回(朝鮮總督府, 1915. 3); 海福紀一, 『朝鮮に於ける新設陶磁器工場』,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第3回(朝鮮總督府, 1919. 3) 참조.

한 업무 수행도 증시한 편이다.<sup>26</sup> 즉 식민국의 통치를 위해 활용된 이데올로기적 정책수단인 전람회, 요업부의 다양한 시제품들과 조선산 도자기가 우열 비교됨으로써 탁월한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sup>27</sup> 교육계와의 교류도 주요하게 추진된 업무로 간주된다.<sup>28</sup> 설립 초기에는 공업전습소 도기과와의 연계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지방의 강습소나 전습소 등 직업교육센터로 확산되었다. 이외에도 1930년대 후반에는 신설된 공예부와 함께 수출품 개발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sup>29</sup> 유기대용품으로 쓰일 도자제 연구 및 대중화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요업부를 비롯한 전 부서의 연구 성과와 업무현황들은 『報告書』와 『年報』로 발간되어 학술사업을 전개시켰을 뿐 아니라 양국 종사자 및 시험소간의 정보교류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sup>30</sup>

### Ⅲ. 시기별로 본 도자정책 양상

본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외 정세의 흐름에 따라 일제의 식민정책 역시 동류현상이 빚어졌다는 전제 하에,<sup>31</sup> 중앙시험소의 도자정책을 총 4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4 요업부에서 실시한 개량실지지도의 유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기술진이 유망 산지를 자체 선정하여 제조 능력 일체에 대해 보조와 후원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요업부가 지역 유지나 관할 도청과 협력하여 일정 산지에 도자기공동작업장을 설립한 뒤, 이 작업장의 실지지도는 물론 운영을 총괄하는 유형이었다. 이외 사업주가 직접 건의하여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1931, pp. 13-16).

25 1910년대에 비해 20년대에는 도자기 염료에 관한 연구(陶器染付法試驗), 원료분쇄 및 조합에 관한 연구(粉碎機用球石試驗), 법랑칠기에 관한 연구(陶磁器及瑯瑯鐵器製造試驗), 공동작업장과 조합 신설 그리고 제품 의뢰생산 및 연구(依頼試驗) 등이 추가되어 업무의 폭이 다양해지며 특히 30년대 이후에는 수출품 및 대용품 개발이 더해진다(廣瀨大藏事務官稿, 『朝鮮産業開發問題』, 朝鮮出張報告 第1卷, 1927, p. 238).

26 박성진, 『일제 초기 '朝鮮物産共進會' 연구』,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신서원, 2003), p. 81; 최석영,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민속원, 2008), p. 29.

27 최석영, 위의 책, pp. 25-29.

28 최공호,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8(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0), p. 109.

29 朝鮮輸出工藝協會,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相關スル件』(1939. 7. 4); 朝鮮輸出工藝協會, 『朝鮮於ケル 陶磁工藝振興保存相關スル協議會開催ノ件』(1942. 6. 27); 朝鮮輸出工藝協會,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相關スル件』(1942. 7. 6); 朝鮮輸出工藝協會,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相關スル件』(1942. 7. 8) 참조.

30 『報告書』는 1915년부터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1호~10호 혹은 1호~20호로 묶어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간행하였고, 『年報』 또한 매년 간행되었다. 그러나 1939년을 전후하여 간행 횟수가 축소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국내에 『報告書』는 전권이 남아있으나, 『年報』는 1930년부터 1939년까지만 남아있다.

31 신용하,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문학과 지성사, 2006), pp. 15-27.

## 1. 제 1기(1910-1919)

1910년대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지만 통치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과도기인데다, 전쟁 경기를 타고 고도성장한 일본공업이 전후에 직면한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타개책을 시급히 요구하던 때였다.<sup>32</sup> 따라서 이 시기는 일제의 대표적인 타개 수단이 부족한 원료의 공급에 있었기에 정책의 방향 또한 식민지 개발을 위한 기초준비 작업과 일본 자본가들의 조선 진출에 초점 맞춰졌다.<sup>33</sup> 요업은 원료공급지이자 독점적 상품판매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조건을 겸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시험소 요업부를 중심으로 일제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조사에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

### 1) 도자산업 실태조사 착수

이 시기 요업부는 식산흥업이 보장된 조선 요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다양한 업무들을 개시했다. 조선 내 일본 기업을 확대하고 왜사기 수출증대 등의 문제와 결부된 이 업무는 총독 부에서도 크게 주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요업부는 식민 초기의 도자제조 현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과 개량을 병행한다는 목적 하에 전국의 도자기산업 실태를



도 5-1 조선시장의 왜사기 판매, 일제강점기, 『朝鮮の窯業』



도 5-2 〈백자모란문호〉, 일본 尙本窯元,  
일제강점기, 9,0×8,4×6,7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sup>32</sup> 조재곤,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 『한국문화』 31(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6), p. 257.

<sup>33</sup>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되던 관세법과 관세정률법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조선의 대외무역을 일제에 정책적으로 종속시켰으며 경제적 수탈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광업령, 산림령, 어업령 등을 발표하여 조선의 원료(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 유출을 시작했다.

조사했다. 그런데 일제는 강점 직후 조선의 공업 억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회사령을 공포했다. 시장 수요가 큰 품목이었던 도자기의 경우 조선에 유입된 왜사기와의 경쟁 차단으로 이미 생산력의 상당부분이 분해되었지만, 회사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상태였다(도 5-1, 5-2). 따라서 당시의 이 조사는 분포 실태를 추적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만 충족시켰을 뿐 실제 개선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적어도 10년대 중반 이전에 총독부와 시험소의 특별 지원이 미친 곳이 평양자기주식회사 정도였던 것 또한 사실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로 인해 조선백자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다(도 6). 일부에서는 왜사기풍 그릇들이 모방 생산되기도 했지만 비교대상이 될 만하지 못했다.



도 6 <백자양각동채국화문병>, 경기 여주, 일제강점기, 19.4×12.8cm, 이병창컬렉션

그러나 소위 조선인 기업의 발흥기로 불리는 1910년대 후반 이후에 접어들면서는 비록 수공 방식을 유지하긴 했지만 가내부업의 가내공업 전환이 가시화되어 생산규모와 공장 설립 등이 완화되기 시작했다.<sup>34</sup> 이 변모는 1919년 요업부가 신설 도자기공장을 새롭게 일괄 조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sup>35</sup>

## 2) 요업개발을 위한 기초 원료조사 실시

식민지 조선을 원료공급지로서 활용하고 원시가공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원료조사는 1910년대부터 비교적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sup>36</sup> 이 조사는 토양여건상 원료의 수급에 많은 차질을 안고 있던 일본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풍부한 원료와 저렴한 工賃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도자산업이, 과학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롭게 조망될 것이라 지적인 각계각층의 재인식으로 더욱 촉진되었다.<sup>37</sup> 비록 이 시기는 식민 초기라 조사대상지와 품종 등이 협소했지만 점차 범위는 확대된다.<sup>38</sup> 이밖에도 요업부는 조사된 원료들의 수요공급 즉 납품방식과 이권 등을 책

<sup>34</sup> 오미일, 「1910년대 중·후반 조선인 산업자본의 형성」, 『한국근현대사연구』 20(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p. 71.

<sup>35</sup> 海福紀一, 「朝鮮に於ける新設陶磁器工場」,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1-10(朝鮮總督府, 1919.3) 참조.

<sup>36</sup> 加茂正雄, 「朝鮮の資源を開發せよ」,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朝鮮新聞社, 1926), p. 265.

<sup>37</sup> 海福紀一, 위의 보고서, p. 10.



도 7 중앙시험소의 전통자기 연구, 일제강점기,  
『國立工業技術院百年史』



도 8 중앙시험소와 공업전습소의 합작품,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1915,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정하는 문제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독부는 양질의 조선산 원료들이 일본의 도자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더불어 애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요업부가 책정한 1급 원료의 공급처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공장이거나 일본 유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sup>39</sup> 반면 자본력과 제작장 운영규모 일체가 빈약했던 조선인에게는 고급 원료의 공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sup>40</sup> 따라서 민족별 원료수급의 격차는 이미 표면화된 듯하다.

### 3) 제도기술 및 시제품 개발의 착수

요업부의 기술개발 및 교육은 전통과 산업 영역을 세분하여 연구하려는 방침이 설립 초기부터 있었다.<sup>41</sup>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원자재 개발과 기존 기술의 안정적 보급을 우선시했던 총

<sup>38</sup> 요업부의 원료조사는 1. 자기, 2. 도기, 3. 석기, 4. 옹기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그 중 자기원료는 연질자기와 경질자기로 대분하였고, 특히 경질자기는 酸性磁器, 中性磁器, 鹽基性磁器로 세분하여 연구·조사했다(海福紀一, 「朝鮮産陶磁器原料」, 『朝鮮彙報』(朝鮮彙報社, 1916), pp. 143-145; 小山一徳, 「朝鮮の窯業」, 『朝鮮』(朝鮮總督府, 1931. 2), pp. 35-36).

<sup>39</sup>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12년 일본에서 수입된 원료 총액은 566,881원(이출금액 포함)에 달했다. 이 금액은 동년의 도자기 총 생산액인 389, 239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였다. 이처럼 원료수입액이 생산액을 추월하는 현상은 매년 증가하여 1920년대 중반 경에 이르면 대략 3배에 달하는 1,677,989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기에는 상당량의 원료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지만 생산력은 이에 크게 못 미쳤으며, 특히 일본으로의 원료유출 정책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각종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小山一徳, 「朝鮮に於ける陶磁器業の産業的地位と斯業の振興策」, 『朝鮮經濟雜誌』122(京城城商業會義所, 1926. 2), pp. 3-4; '화학공업박람회 조선출품' 《매일신보》1917. 7. 28.

<sup>40</sup> 小山一徳, 「朝鮮に於ける陶磁器業の産業的地位と斯業の振興策」, 『朝鮮經濟雜誌』122(京城城商業會義所, 1926. 2), pp. 3-4.



도 9 중앙시험소를 방문한 영친왕, 재현청자에 기념휘호, 1917, 《매일신보》

독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제도장치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 전통도자공예 분야가 보다 관장된 편이다(도 7).<sup>42</sup> 이 시기 요업부의 전통도자 연구는 대체로 재현과 복원에 초점 맞춰졌다. 그것은 19세기 말엽부터 진행된 고려청자 발굴을 필두로,<sup>43</sup> 이후 일본 이주실업가들의 청자사업 발족,<sup>44</sup> 그리고 이왕가박물관의 고려청자 수집 및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秘苑磁器 제작 등으로 이어지는 '新靑磁文化'의 동류현상이기도 했다.<sup>45</sup>

한편에서는 특수요와 첨단 설비를 갖춘 요업시험실과 조사분석실을 완비한 가운데, 초석단계이기는 했지만 각종 성형술 및 원료가공법 등이 연구되었다. 그 결과 꾸준하게 試製品이 개발되었고, 이를 시제품진열소에 공개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시제품 제작

강습회를 간헐적이거나 실시했다. 당시의 시제품들은 공업전습소 도기과와의 협력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도 8), 요업부 단독으로도 이루어졌다.<sup>46</sup> 합작품의 경우, 1913년 5월 〈공업전습소진열회〉에 최초로 재현청자를 소개하여 판매한 기록이 남아있고, 요업부 단독 제작품의 경우 1918년 1월 요업부를 방문한 영친왕에게 고려청자 재현품을 방문축하 기념품으로 전달했다는 기록 등 다수가 전해진다(도 9).<sup>47</sup> 이외에 요업부는 이 시기 중반 이후부터 전통도자와는 별개로 산업자기 연구개발에도 일보 다가갔다.<sup>48</sup>

41 三山喜三郎, 『朝鮮の工業試驗成績』, 『朝鮮及滿洲』(朝鮮總督府, 1929), pp. 37-40.

42 엄승희, 『1910년대 《매일신보》에 나타난 중앙시험소의 요업정책』,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두리미디어, 2005), pp. 251-258.

43 中吉功, 『朝鮮の二つの美術館』, 『朝鮮美術への道』(國書刊行會, 1979), p. 141.

44 엄승희, 『일제시대 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 『한국근대미술사학』 13(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p. 253.

45 '매매가 잘 되는 미술제작소' 《매일신보》 1919. 4. 3.

46 그런데 이 시기 요업부가 연구개발한 재현품들은 전통식의 진부한 답습과 일본화된 양식으로 변질되어 근대양식의 創出品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전습소와의 기술교류가 그 어느 때 보다 돈독했지만 요업부 연구원 대부분이 전습소 전입 교원을 겸직한다(다 수적으로도 적어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廣瀨大藏事務官稿, 앞의 책, p. 236).

47 《매일신보》 1917. 11. 8-11, 11 ; 1918. 1. 23일자 참조.

## 2. 제2기(1920-1929)

10년대에 이어 20년대에 들어 일본경제의 불황이 이어지자 조선은 이전처럼 산업경제의 공급지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하지만, 조선의 경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공업자본을 국내에 순조롭게 유입시켰고 대신 민족자본을 억압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자기제작소 역시 종전에 비해 급증했지만 산액은 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는 데 그쳤다. 특히 지방산지는 경영규모와 영세성을 여전히 면치 못했으며 품질에서도 여전히 왜사기에 밀렸다(도 10). 오히려 유입되는 각종 안료와 전사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전통성을 상실한 애매모호한 양식들이 만연했다(도 11). 이 시기 요업부는 다양한 대안으로 지방산지의 회생과 복구에 일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큰 기대에 못 미쳤다. 그것은 요업부가 총독부와 요업협회 등의 후원에 힘입어 일본인들의 대형공장에 지원함에 따라 수출품 개발로 이어지게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편 시험소는 20년대 후반 체제개혁(行政整理)을 단행한 총독부에 의해 폐지논란에 휩싸였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어 위기국면에 접어들게 된다.<sup>49</sup>



도 10 <백자발>, 전남 곡성, 일제강점기



도 11 <백자청화표형호>, 1920년대, 15.8×12.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1) 도자산업 촉진과 복구를 위한 사업전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보이면서도 품질개선이 이를 뒷받침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판매력은(유통 및 소비) 그다지 향상되지 못했던 이 시기

<sup>48</sup> 森勇三郎, 「朝鮮陶磁器業調査-朝鮮ニ於ケル陶磁器ノ分類」,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11(朝鮮總督府, 1915), p. 312.

<sup>49</sup> 朝鮮總督府, 『産業調査委員會議錄』(1921. 9), p. 77 ; 안동혁, 「東崇神遊錄」, 『한국과학사학회지』3(한국과학사학회, 1981), pp. 108-109.

는 조선 요업 전반의 기술지원이 시급했다. 요업부가 이전과 달리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일본 인 공장은 물론 조선인에 의해 운영되던 공장과 지방산지에도 지원하여 새로운 제작환경을 구축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특히 1926년 총독부의 요업장려책이 공식화 되자 요업부는 주요 지방산지 17개 군을 선정한 뒤 제조여건 전반을 재조사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했다.<sup>50</sup> 더불어 부업장려 및 잉여인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색이 강한 특산자기산업 개발 도 추진했다.<sup>51</sup> 이러한 개발은 요업부의 지원이 미친 특정산지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 었다.<sup>52</sup>

한편 20년대 중반경 피폐한 가내수공의 제조방식과 부실한 경영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공 과의 제안을 총독부측이 수용하여 설립된 도자기공동작업장의 도입 이래, 조선인들은 생산력의 회생을 경험함과 동시에 요업부로부터 각종 이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53</sup> 이외에 요업부는 실지지도 및 의 퇴시험 등을 주요 업무로 삼았던 시험소의 운영방침에 따라, 유망산지를 돌며 개량실지지도를 실시하기 시작 했다.<sup>54</sup> 그러나 이 시기의 실지지도교육은 도입단계이기 도 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만한 여건을 수반하지도 못 했다.<sup>55</sup> 다만 酒造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고 시세차익이 그다지 높지 못했던 옹기 및 도기에 대한 실지지도는 비 교적 활성화된 편이다(도 12).<sup>56</sup>



도 12 〈水甕〉, 영등포도자기공장, 일제강점기, 일본 개인 소장

50 주요 지방산지에 대해서는 1. 지방요로서의 지위와 지역수요에 미치는 영향, 2. 조선인과 일본인의 가구 수와 이들의 직업별 상황조사, 3. 요업에 관한 연혁, 4. 요업종사 가구 수, 5.窯의 수와 구조에 대한 실태파악, 6. 요업품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최근 5년 내 기준), 7. 제품가격, 8. 원료의 생산지와 구입방법, 9. 제품의 판로와 운송방법 등이 조사되 었다(善生永助, 앞의 책, pp. 123-144).

51 1920년대의 3대 농촌 부업은 製紙業, 紡織業, 窯業이었다(《매일신보》1921. 7. 27, 1927. 7. 30).

52 도자기공동작업장의 설립시점과 운영실태 등에 관한 내용은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령 『朝鮮工業의現勢』(朝鮮總督府殖産局, 1936)에 따르면 설립시점이 1929년부터지만,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일간지들은 이보 다 이른 1926년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中央試驗所年報』를 참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53 宋在璇,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東文選, 2003), p. 250 ; 善生永助, 위의 책, pp. 180-193.

54 朝鮮總督府, 『陶磁器の改良實地指導』,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1930), p. 27.

55 三山喜三郎, 앞의 글, pp. 314-315 ; ‘중앙시험소의 제품실비판매’ 《매일신보》1923. 10. 22.

56 善生永助, 위의 책, pp. 163-164 ; 《동아일보》1926. 5. 14, 10. 3 ; 1928. 11. 30.

## 2) 원료조사와 기술교육의 점진적 확산

조선 요업에 대한 양국 자본가와 실업가들의 관심과 투자가 점차 고조되던 이 시기의 특성상 원료조사와 관련 기술 연구에도 박차가 가해졌다.<sup>57</sup> 따라서 원료의 경우, 기존산지의 산출량과 조사대상 품종이 이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일본으로의 유출량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공급은 여전히 수출 전문 재조선 일본인 공장에 우선적이었던 반면,<sup>58</sup>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실지지도가 시행된 일부 제작장에 대해서만 원활하여 조선인들의 수급량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결국 이 시기는 요업부의 연구 성과에 따른 파급이 일본과 재조선 일본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빛을 발하던 때였다고 볼 수 있다.<sup>60</sup> 특히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일본으로 유출된 평균 원료량이 이전 시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sup>61</sup> 품목별로 보면 2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산출지 면적이 수직 상승한 고령토, 규사가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62</sup> 당시 통계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표 산지로는 경남 하동, 산청, 고성, 각 군과 경북 청송, 경산 그리고 황해도 해주, 평안도 수안과 강원도 양구 및 함경의 회령, 경성, 명천, 성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년대로 접어들면 비록 지엽적이기는 했지만 시험소의 제조기술 전습이 공교육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sup>63</sup> 우선 요업부는 전습소의 체제개편으로 거듭난 경성고등공업학교와 연계교류를 지속했다.<sup>64</sup> 또한 연중 공개된 시제품진열소 이외에도 매년 〈工專成績品陳列會〉를 개최하고 2만여 종의 방대한 성적품을 전시했을 뿐 아니라 요업부 실습장 일체를 개방하여 일반인들의 안목을 넓혀주었다.<sup>65</sup> 특히 시험소와 총독부에 상품진열관을 설치하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시험소의 공식 개발품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요업

57 朝鮮總督府殖産局 編, 『朝鮮工場名簿』(1933), pp. 45-63.

58 資源研究社, 앞의 책, p. 308.

59 '최근 조선의 상공업-요업원료토석' 《매일신보》 1922. 1. 16 ; 善生永助, 앞의 책, p. 84.

60 小山一徳, 「朝鮮に於ける陶磁器業の産業的地位と斯業の振興策」, 『朝鮮經濟雜誌』122(京城商工會議所, 1926), pp. 124-130.

61 『統計年報』(朝鮮總督府, 1916-1920·1921-1928) 참조.

62 『鑛區一覽』(朝鮮總督府, 1920-1929) 참조.

63 《동아일보》 1922. 10. 22·1929. 10. 11 ; 《매일신보》 1929. 10. 11.

64 京城高等工業學校,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1943), p. 2.

6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一覽』(1915), pp. 132-133.

부는 각 도청의 보조를 받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강습회의 개최범위와 규모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갔다.<sup>66</sup>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각 도별 공업학교에 요업부가 신설되고 공예지도소, 공예전습소, 요업강습소 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 3. 제3기(1930-1936)

제3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전반부는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난이 속출하던 때였다. 예외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일본은 만주사변 발발(1931)과 상품시장 경쟁에 따른 자원 공급지 및 투자지역 획득 등의 대응책을 설정한 가운데, 조선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였다.<sup>67</sup> 특히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수산업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제는 기존의 중농정책을 공업정책으로 전환시키면서 일본의 민간자본 유치에 더욱 만전을 기했다.<sup>68</sup>

시험소 역시 이와 같이 급변하는 일본 정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우선 시험소의 전반적인 운영지침은 30년대의 식민정책 기조인 공업 진흥 및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게 되어, 강점 전반기(1910-1920)까지 이어져 오던 기초 연구·조사 위주의 흐름이 전환되거나 강화되었다. 요업부의 경우 일본의 전시 통제정책으로 부각된 대용품 개발산업에 주력하여 실용화와 대중화에 다가가면서 한편으론 새로운 원료 발굴과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합류했다.<sup>69</sup>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험소의 행정적 문제였다. 2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총독부의 공업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시험소는 이후부터 점차 축소되더니, 20년대 말 경에는 체제개편으로 인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 논란은 불황기의 재정위기와 임직원의 근무태만 등의 문제들로 불거졌지만,<sup>70</sup> 이 보다 시험소의 연구 성과에 따른 활용성이 기대 이하라도 본 총독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sup>71</sup> 시험소 존속 문제가 제기되자 이해관계가 깊었던 여러 상공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으며 결국 1932년경 폐지는 철회되었다.<sup>72</sup> 폐지논란이 종식되자 시험

66 '高敞燒器組合'《동아일보》1925. 7. 31.

67 1930년대는 발전소, 군수공장 건립, 광산 개발, 금속·기계·중화학공업 등이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병참기지정책 하에 활성화되었다.

68 宇垣日成, 「朝鮮統治に就いて」, 『朝鮮總覽』(朝鮮總督府, 1933), p. 7.

69 山村銳吉, 「代用品工業に就て」, 『朝鮮』(朝鮮總督府, 1936. 1), pp. 11-12.

70 특히 1930년대 초의 시험소 예산액은 만철 중앙시험소와 비교해 볼 때 10%에도 못 미쳤다(德家藤榮, 「中央試驗所問題に就て」,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京城商工會議所, 1932. 7), p. 31 ; 「中央試驗所主催の工業懇談會」,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京城商工會議所, 1933. 5, pp. 54-56).

71 朝鮮總督府, 『産業調査委員會會議錄』(1921. 9), p. 77.

소는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공업 종사자들의 활용 참여율을 높이는 등 기존 운영 체제를 효율적으로 전환시켰다.<sup>73</sup> 그럼에도 시험소는 한동안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총독부의 재신임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sup>74</sup>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험소의 연구진은 20년대에 이어 계속 증원되었고 연구실 규모도 일부 확장되었다.<sup>75</sup> 이는 비록 구조적인 문제로 위기상황에 직면했지만 시험소에 남다른 의지와 저력을 지니고 있던 운영진들의 분투와 조선 공업 진흥을 강조한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등이 얻어낸 결과로 해석된다.<sup>76</sup> 여기에 30년대 중반 이후 전시체제로 인한 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총독부가 시험소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했다.

### 1) 도자산업의 새로운 방향과 모색

이 시기는 대공업기에 부합될 만큼 일본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조선 요업계도 이러한 구도의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면서, 규모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던 兩國의 생산체제에 일부분 변화를 보이게 된다. 가령 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자율적인 생산구조 및 라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거나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도 전시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장하여 자체 생산량을 증폭시켰다(도 13). 물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품질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분명해졌다. 즉 당국의 지원 하에 있던 제작장에서는 근대화된 제작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전하자금 창출을 위한 특수품 개발도 동반되었다. 반면 그 외는 제조실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품의 질적 저하와 생산량의 극감이 가속되었다.

72 대표적으로 조선상공회의소, 경성상공회의소, 경성상공조합연합회, 조선공업협회 등이 나서 시험소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상·공업회의소 및 협회들이란 강점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과 상인 자본가의 활동이 응축된 기구이자 공간으로서 역할했다. 특히 상업회의소의 경우, 조선과 일본 회의소가 통합된 이후에는(1914-1915) 조선인들의 활동이 제약되었음은 물론 일본자본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인 중심 기구로 전락했다. 따라서 회의소의 주도권은 대부분 일본측에 있었고 그 외 조선인 주도층들조차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들로 구성된 소위 친일계였다(『매일신보』 1918. 5. 23, 1931. 11. 3; 『朝鮮に於ける工業生産品』, 『朝鮮經濟雜誌』 108, 京城商業會議所, 1924. 12, p. 2).

73 요업부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뢰, 시험, 감정업무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부속시설을 일체 개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1933, p. 6).

74 『中央試驗所主催の工業懇談會』,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京城商工會議所, 1933. 5), p. 54.

75 본고의 (표 1)을 참조.

76 중앙시험소의 폐지 반대와 존립을 위해 대안은 주로 상공업회의소가 주최한 공업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朝鮮商工會議所主催の工業振興懇談會概況』,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京城商工會議所, 1933. 6, pp. 16-24).



도 13 〈決戰〉, 「供出報國銘 백자 발」, 1940년대 초, 일본경질 도기주식회사, 개인 소장



도 14-1 여주도자기공동작업장 전경, 1930년대 초,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도 14-2 여주도자기공동작업장터의 현재 전경, 경기도 여주군 오금리 236번지 소재

한편 20년대에 시작된 요업부의 복구지원책은 30년대로 이어지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행정문제로 혼란스러웠던 30년대 전반에도 이와 같은 지원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시기적인 요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요업부의 복구지원 방안은 이전과 다소 차별되었다. 이를테면 단순히 기술 지원을 도모하기 보다는 작업장 관리 및 제작 일체의 자급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 인력과 전문경영의 육성에 협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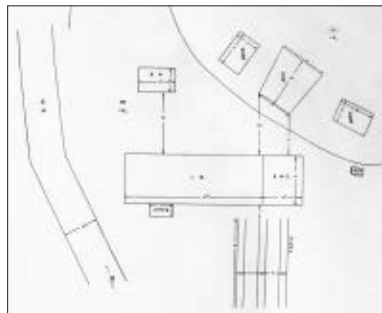
대략 30년대 초부터 평양, 여주, 시흥, 봉산, 양구 등 주요 산지들을 집중 재조사하여 도자기공동작업장이 설립되고 개량실지지도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실지지도 내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지지도의 시행지역이 매우 한정적임이 확인된다. 작업장도 설립에 따른 심사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영향이 미친 지역들은 전반적인 생산체제의 전환은 물론 특산자기 및 수출자기 생산처로 지목될 만큼 향상되기도 했다.<sup>77</sup> 따라서 이러한 제작구조의 도입이 조선 요업상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도제기술상의 진보와 체계적인 생산라인의 기반을 구축시키는 토대

<sup>77</sup> 송재선, 앞의 책, p.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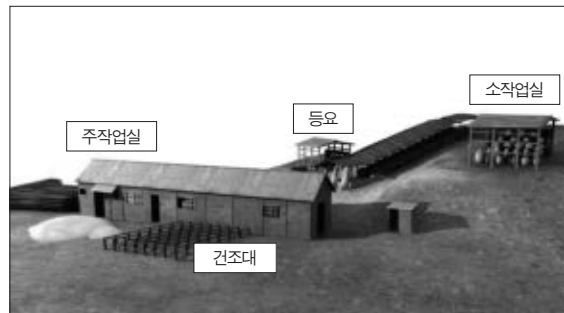
표 2 중앙시험소 요업부의 주요 改良實地指導 내역(1930-1936)

年度	내역	해당 지역
1930	水甕改良實地指導, 陶磁器의 改良實地指導,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경기도 시흥군, 수원군, 부천군, 연천군·평안남도 평양제도업조합·경기도 여주군·경기도 강화군
1931	水甕改良實地指導, 平壤磁器의 改良實地指導,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楊口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경기도 시흥군, 수원군, 부천군·평안남도 평양제도업조합·경기도 여주군·강원도 양구군·경기도 강화군
1932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楊口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惠山燒의 改良	경기도 여주군·강원도 양구군·경기도 강화군·함경남도 혜산군
1933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楊口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惠山燒의 改良, 永登浦陶磁器共同作業場의 設置	경기도 여주군·강원도 양구군·경기도 강화군·함경남도 혜산군·경기도 시흥군
1934	1933년과 同一	1933년과 同一
1935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楊口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惠山燒의 改良, 永登浦陶磁器共同作業場, 鳳山燒	경기도 여주군·강원도 양구군·경기도 강화군·함경남도 혜산군·경기도 시흥군·황해도 봉산군 산수면
1936	驪州燒의 改良實地指導, 燒耐甕製造實地指導, 永登浦陶磁器共同作業場, 鳳山燒, 開城高麗燒	경기도 여주군·경기도 강화군·경기도 시흥군·황해도봉산군 산수면·황해도 개성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1930-1936).



도 15-1 여주도자기공동작업장 평면도,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도 15-2 여주도자기공동작업장 재현도

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2년경 경기도 여주군 오금리에 설립된 여주도자기작업장을 들 수 있다(도 14-1, 14-2).<sup>78</sup> 이 작업장은 인근 오향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소규모로 운영되었지만, 조선인들이 근대식 생활자키들을 전담 생산하여 인근지에 대량 공급할 만큼 운영이 순탄했다(도 15-1, 15-2). 이에 비해 황해도 봉산군에 설립된 봉산도자기작업장은 지역특산품으로서 전통백자를 생산했던 대표적인 곳으로 볼 수 있다.<sup>79</sup> 특히 이곳의 제조물은 인근 해주의 백자항아리와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황해도 일원의 제작 양상이 공존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도 16-1, 16-2). 생산량과 규모, 판로 등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평양도자기작업장의 경우, 요업부는 물론 일본인 관계자들의 개입이 유달리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sup>80</sup> 이상의 예들로 보아 당시의 공동작업장들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 16-1 봉천도자기동등작업장 제작과정, 황해도 봉천군, 일제강점기,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도 16-2 <해주청화백자철회모란문호>, 일제강점기, 71×26×52cm,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sup>78</sup> 大橋武夫·吉田寛一郎, 「驪州磁器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13-1(朝鮮總督府, 1932) 참조.

<sup>79</sup> 大橋武夫·千葉正章, 「平壤磁器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13-1(朝鮮總督府, 1932-1933) 참조.

<sup>80</sup> 山崎亨·山田義雄, 「窯業原料調査 第三報 大同陶石調査報告」,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16-4(朝鮮總督府, 1936) 참조.

이외에도 조선 상공업계가 일시적 호황을 누리려 일본인 경영회사(朝日合資會社 포함)보다 조선인 단독투자회사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한 요업부는 새로운 지원방침을 내세웠다. 다시 말해 일본인이 운영하던 대다수 대형공장들이 전시체제로 인해 통폐합되어 수요 부족현상이 일어나자, 요업부는 이들 공장에 대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해 중반부로 접어들



도 17 漢北窯業組合 전경, 1930년대 중반, 『北鮮開拓』

수록 옹기와 상사기 집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산지들은 완연하게 쇠퇴하는 추세였다. 그나마 생산이 이어진 백자산지들은 공동작업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도자기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표 3).

요업부의 지원과 개입은 미약했지만 설립에 큰 제약이 없으면서 설립자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던 도자기조합은 이 시기 조선인들 간의 자급자족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유일한 제작공간이었다. 드물게는 생산실적이 우수하여 도자기작업장 못지않은 요업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판로 등이 개척된 사례도 없지 않다(도 17).<sup>81</sup> 그러나 대다수 조합은 공동작업장에 비해 기술보조와 정부 지원 자금이 미약했기 때문에 큰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표 3 도자기조합의 소재지와 생산품 (1928-1930)

설립년	공장명	소재지	생산품
1928	고창소기조합	전라남도 고창	전승백자, 왜사기품 사발류
1930	회령도자조합	함경북도 회령 오동	전승백자, 왜사기품 사발류
1930	평양제도업조합	평양시	왜사기류
1930	한북요업조합	함경남도 갑산군 운흥리	전승백자, 왜사기품(중국품) 사발류
1930	문경도자기조합	경상북도 문경	전승백자, 왜사기품 사발류

<sup>81</sup> 지역 생산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도자기조합에 관한 실태 보고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조합의 운영과 생산품, 생산력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간지와 잡지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자기조합은 1920년대 중반경 고창, 영등포 등지에서 결성된 이래 1930년대에는 웬만한 산지에 대부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동아일보》 1925. 7. 31·1926. 10. 3).

## 2) 일본의 원료유출 확대

30년대의 식민정책은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공업화와 군수물자 공급에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원료문제는 기존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개발과 유출을 어느 때보다 심도 깊게 다루었다.<sup>82</sup> '장래의 朝鮮陶土는 日本陶土의 生命線'이라고 공식 발표한 총독부의 입장에서도 짐작되듯이,<sup>83</sup> 조선산 원료들은 분명 일본 요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84</sup> 특히 30년대 중반 이후의 시험소는 원료연구소, 독립공업시험소, 지질조사소 등과 공조하여 다양한 원료 유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협의했다.<sup>85</sup> 뿐만 아니라 총독부 상공과, 광산과 등 과도 수시로 요업자원협의회 및 요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요업자원 개발 및 유출건을 결정했다.<sup>86</sup> 당시 연구인력이 부족했던 시험소가 양국의 관련업계 종사자들마저 이 조사사업에 참여시켰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sup>87</sup>

한편 유출문제가 심화되고 원료의 고갈사태가 예견되자, 각 도청에서는 이를 조절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原料保有陶土地帶'지정을 건의했고, 1935년경 조선물산협회도 이와 유사한 안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sup>88</sup> 그러나 조선의 원료들은 40년대에 접어들기도 전 고갈사태를 맞아, 고급원료들의 일본유출이 결코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sup>89</sup> 이무렵 일본요업협회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총독부에 직접 촉구했다는 사실은 이의 추정을 대변한다.<sup>90</sup> 또한 이 시기 요업부가 유출시킬 원료들을 평남, 함북 등지에서 채굴되는 2급 원료로 대체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험소는 원료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요업계의 사정을 수렴하여 평안남도 강서군과 대동강 인근에서 산출되는 도토들을 재분석한 뒤 일본 현지에 보고하고, 이 조사과정에 교토요업시험소의 기술진들과도 교류하는 추진력을 발휘했다.<sup>91</sup>

82 이태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변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한국과학사학회, 2009), p. 130.

83 '經賣2만원으로 窯業原料를 조사—장래의 朝鮮陶土는 日本陶土의 生命線' 《매일신보》 1933. 10. 28.

84 小山一徳, 「朝鮮に於ける陶磁器業を如何にすべけん」, 『朝鮮商工獎勵官報』 12(朝鮮商工會議所, 1934. 12), pp. 3-4.

85 山村銳吉, 「朝鮮資源の特性と工業の飛躍」, 『朝鮮』(朝鮮總督府, 1936. 1), p. 73.

86 《매일신보》 1936. 1. 21, 1. 25.

87 尹明憲·河合和男, 『植民地期の朝鮮工業』(未來社, 1991), pp. 71-73.

88 《매일신보》 1933. 11. 28·1935. 6. 16.

89 山崎亨, 「朝鮮産窯業原料調査概要」,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15(朝鮮總督府, 1934); 佐野千一·山崎亨, 「窯業原料調査報告第八報」,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17-6(朝鮮總督府, 1937) 참조.

90 '陶器原料粘土調査費 計上—중앙시험소 계획' 《동아일보》 1935. 6. 26.

91 '도자기기술원회의—瀨戶市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6. 5. 14.

### 3) 도자기기술교육의 저변화

1930년대는 공교육계의 도자공예교육 보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 우선 공립보통학교에는 실과교육으로서 도자공예교육이 권장되어 교내에 요업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또한 중등교육의 확충을 위해 신설된 공업학교와 직업학교에도 陶工科가 설치되어 전문 기술자 양성이 본격 추진되었다. 더불어 30년대 중반 이후에 설치된 시국대책위원회는 일반 미술학교의 설립을 저지하는 대신 공예 관련 연구기관 및 공예학교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시기는 도자공예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또한 요구되던 때였다.<sup>92</sup>

시험소의 업무도 이전처럼 각종 전람회와 강습회를 개최하고 공공단체들의 기술지도 및 부업지도자 양성을 도모하여 이러한 흐름과 유사했다.<sup>93</sup> 그 중 도자공예강습회는 시험소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된 민간인 대상 전문교육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밖에 요업부는 유기대용 품으로 쓰일 도자제 개발과 저변화에도 전념했다(도 18).



도 18 도기 우체통, 1930년대 후반, 《매일신보》

### 4. 제4기(1937-1945)

중·일전쟁(1937)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던 이 시기는 일제의 군수물자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수탈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욱이 1938년의 「국가총동원령」발포와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된 황국신민화정책은 이 사태를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시험소는 시국경제체제에 따른 압박으로 기존 업무를 축소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적어도 40년대 초반까지는 대용품 개발과 分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 여전히 공업정책의 주

<sup>92</sup> '시국대책위원회설치 遲延될지도 未知, 美術校는 工藝研究機關으로' 《매일신보》 1938. 6. 21.

<sup>93</sup>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1932년에 개최된 경성공업학교(창립25주년)와 경성고등공업학교(창립15주년) 기념 전람회였다. 이 전람회의 개최취지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진보된 기술력을 전달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공업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있었다.



도 19 <백자화문발·대접>, 행남사, 1940년대 중반, 개인 소장

도적 역할을 다하며 위상을 잃지 않았다.<sup>94</sup>

한편 다급해진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자본 진출은 꾸준했고 더불어 조선인 기업도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sup>95</sup> 특히 총동원체제에 따른 유기공출로

시국화된 도자산업은 일시 호황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전시상황의 가열로 물자난이 심각하던 1943년 이후부터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기업정비와 생산통제가 단행되어 급격히 몰락하고 만다. 드물게는 해방이 가까워질 무렵 조선인에 의해 근대식 도자기공장이 하나둘 설립되는데, 이들은 일제의 보호 아래 성장·동화되었던 예속 자본가들이 아닌 일부 민족 자본가들에 의해 일구어졌다(도 19).<sup>96</sup>

### 1) 전시경제체제 하의 도자산업

전시체제가 강화되던 이 시기는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최우선시 하여 도자산업을 비롯한 경공업계의 발전상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생산력의 자급률은 70%에 육박해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sup>97</sup> 그러나 민족별로 보면 조선인의 비율은 일본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당시로서는 조선인들의 공업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간의 생산 격차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44년 도자기 행상을 감축시키기 위해 제정된 도자기수급통제안과,<sup>98</sup> 같은 해 도자기사매업을 도입한 조선공예통제협회의 발족으로 이 상황은 악화되었을 것이다.<sup>99</sup> 여기에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된 원료 유출과 고갈사태로 인해 요업계의 복구는 더욱 요원해

<sup>94</sup> 安東赫, 「長期戰の代用品」, 『朝鮮行政』(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8, 8), pp. 23-32; 『工業朝鮮의 參謀部, 中央試驗所 擴充, 重工業勃興에 拍車』《조선일보》1939. 7. 5.

<sup>95</sup> 朝鮮總督府 法務局, 『經濟情報』第7輯(1941), pp. 241-250.

<sup>96</sup> 《매일신보》1943. 7. 18, 8. 21.

<sup>97</sup>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1948) 참조.

<sup>98</sup> 『陶磁器 需要統制實施, 既存卸商을 整備減縮』《매일신보》1944. 4. 21.

<sup>99</sup> 《매일신보》1944. 5. 10, 7. 16, 8. 16;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工場名簿』(朝鮮工業協會, 1942-1945) 참조.

졌다. 도자 생산과 직결된 원료문제의 심각성은 1940년대에 접어들어 조선산 도자원료들의 일본유출 관련 신문 보도마저 거의 사라진 점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요업부는 이 같은 침체국면에서도 지방 산지를 순회하고 유망 도자기공장에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요업부가 대용품 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전면 축소했기 때문이지만, 그 보다 원료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길이 없어 통제정책의 합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방 년에 이르면 몇몇 신생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작장은 생산력은 물론 회생력을 거의 상실했다.

## 2) 수출지향성 제품개발 및 지도자 육성 지원

3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비록 미술공예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전근대적 기술 인력들을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시켜야 한다는 총독부의 의지가 표면화되어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왔던 미술공예학교 설치제안이 다시 대두되었다.<sup>100</sup> 물론 이러한 방안은 시국정책에 따른 압박으로 결코 시행되지 못했지만 공예산업계의 인식은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었다.

시험소의 운영실태도 이와 유사했다. 즉 시험소는 이전처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이나 교육에 큰 힘을 실지 못하고 자국 이익 창출을 위한 수출품 개발관련 업무만 이어갔다. 특히 1938년에 신설된 공예부와 더불어 수출공예품과 토산품 개발 및 지도자 육성에 매진했으며(도 20), 수출품 개발촉진을 위해 지방의 공업전습학교를 지원하는



도 20 <수출공예품>, 1940년대 초, 중앙시험소,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



도 21 조선수출공예품전람회, 1940년대 초,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sup>100</sup> '미술공예학교, 設置機運농후' 《매일신보》 1940. 5. 31.

<sup>101</sup>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所員ノ出張』,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1939), pp. 60-64.

가 하면,<sup>101</sup> 수출 관련 서적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무료 배포한 바 있다.<sup>102</sup> 당시 요업부는 조선수출 공예협회, 조선식산조성재단, 조선공예진흥회 등 각계 단체들과 협력하며 수출품 진흥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기적으로 식민정치가 마감되는 시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부터 매년 개최된 <조선수출공예품전람회>와 <수출품공예전>에 참여하면서 개발의지를 고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하다(도 21).<sup>103</sup> 그 외 시험소는 분소 설립을 통해 수출공예품 생산을 증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아 지방공업시험장과 도립공예전습소를 설립하고 제작 시현회 및 강습회를 간헐적이거나 개최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시험소 요업부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시행한 도자산업의 중추적인 업무를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도자산업 전반의 動態와 원료문제 그리고 기술교육의 업무들을 다각적으로 정리한 결과, 요업부의 시행방안들이 이전과는 다른 제작 구조를 구축시켰고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도자산업의 일부분이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시험소의 주된 역할과 시행된 업무 대부분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제의 내부적 요구에 따른 식민정책의 변화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험소는 설립부터 일제가 요구하는 공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에 적절한 다양한 연구에 도전했으며 이는 안정적인 식민착취에 기반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시험소는 다른 기구와는 달리 조선의 상업자본이나 제작자 그리고 연구원의 심층적인 활동과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조선인들에게 결코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험소와 조선 요업 상의 긍정적인 연관 효과는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도자생산의 구조적 특질은 자율적이기 보다 對日 의존성과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조장되었다.

그럼에도 시험소는 도자생산의 기술력과 유통 등에 있어 근대화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도록

<sup>102</sup> '수출공예품제작, 참고자료를配布, 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동아일보》 1940. 2. 15.

<sup>103</sup> 《동아일보》 1940. 4. 21 ; 《매일신보》 1941. 10. 2일자 ; 朝鮮輸出工藝協會가 1940년대 초에 발표한 「朝鮮於ケル 陶磁工藝振興促進ニ關スル協議會開催ノ件」 참조.

유도했으며 원료 연구에 기반한 직간접적 정보 제공과 전시공간의 활용 그리고 강습문화의 대중화 및 참여 고취 등 일정부분에 기여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 기관의 평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시험소가 추구한 '도자산업의 근대화', '근대기술의 보급' 나아가 '식민지기의 공업화'가 조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key words)** \_ 도자정책(Ceramics industry policy), 조선총독부(Government-General of Joseon), 중앙시험소(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공업전습소(Laboratory of Industry), 요업부(the ceramic industry station), 산업자기(industrial ceramics)

■ 투고일 2010년 5월 25일 | 심사개시일 2010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29일 ■

## 참고문헌

### 國文

#### 단행본

-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임성모 옮김, 『滿鐵』, 산치림, 2002.
- 國立工業技術院, 『國立工業技術院百年史』, 1993.
- 宋在璇,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東文選, 2003.
-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한국근대공예사론』, 미술문화, 2008.
- 최석영, 『한국박물관 100년 역사』, 민속원, 2008.

#### 논문

-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 『경제사학』 35, 경제사학회, 2003.
- 박성진, 「일제 초기 '朝鮮物産共進會' 연구」,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 신용하,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 2006.
- 안동혁, 『東崇神遊錄』, 『한국과학사학회지』 3, 한국과학사학회, 1981.
- 엄승희, 「1910년대 《매일신보》에 나타난 중앙시험소의 요업정책」,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 \_\_\_\_\_, 「일제강점기 도자정책과 제작구조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태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변화」,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한국과학사학회, 2009.
- 조재곤,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 『한국문화』 3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6.
- 최공호,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근대미술사학』 154,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0.

#### 신문

##### 《동아일보》

- 1922년 10월 22일, 1925년 7월 31일, 1926년 (5월 14일, 10월 3일), 1927년 7월 30일, 1928년 11월 30일, 1929년 10월 11일, 1931년 11월 7일, 1932년 (1월 31일, 2월 3일, 10월 25일), 1935년 (6월 26일, 11월 29일), 1936

년 (3월 31일, 6월 14일, 7월 3일), 1938년 12월 10일, 1939년 11월 21일, 1940년 2월 15일.

#### 《매일신보》

1911년 10월 26일, 1912년 9월 8일, 1913년 (2월 14일, 5월 13일, 6월 15일, 8월 3일), 1914년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7일, 5월 7일), 1915년 (4월 25일, 4월 27일), 1917년 (7월 28일, 11월 8일, 11월 11일), 1918년 (1월 23일, 12월 20일), 1919년 4월 3일, 1921년 7월 27일, 1922년 1월 16일, 1923년 10월 22일, 1925년 1월 17일, 1927년 (7월 7일, 7월 30일), 1928년 12월 25일, 1929년 (10월 11일, 12월 4일), 1930년 1월 23일, 1931년 (9월 20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7일), 1932년 (2월 27일, 5월 10일), 1933년 (3월 1일, 7월 25일, 8월 16일, 10월 28일, 11월 23일, 11월 28일, 12월 7일), 1935년 (6월 26일, 11월 30일), 1936년 (1월 21일, 1월 25일, 5월 15일), 1937년 1월 11일, 1938년 (1월 9일, 5월 13일, 6월 21일, 6월 25일, 8월 4일, 8월 26일, 10월 2일, 10월 22일, 11월 5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20일), 1939년 (1월 29일, 3월 15일, 3월 23일, 6월 2일), 1940년(1월 20일).

#### 《조선일보》

1923년 2월 11일.

#### 日文

#### 일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一覽』,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12. 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一覽』, 1915.

朝鮮總督府, 『鑛區一覽』, 1920-1929.

京城高等工業學校,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1943.

#### 단행본

廣瀨大藏事務官稿, 『朝鮮産業開發問題』朝鮮出張報告 第1卷, 1927.

北村彌一郎, 『北村彌一郎窯業全集-第3卷』, 大日本窯業協會, 1914.

杉田 望, 『滿鐵中央試驗所: 大陸に夢を賭け南たち』, 講談社, 1990.

\_\_\_\_\_, 『滿鐵中央試驗所』, 徳間書店, 1995.

善生永助, 『朝鮮の窯業』, 朝鮮總督府, 1926.

尹明憲・河合和男、『植民地期の朝鮮工業』, 未來社, 1991.  
池邊重熾, 『滿鐵中央試験所を顧みる』, 中日文化協會, 1931.  
朝鮮總督府殖産局 編, 『朝鮮工場名簿』, 1933-1940.  
朝鮮總督府, 『産業調査委員會會議錄』, 1921. 9.  
朝鮮總督府 法務局, 『經濟情報』第7輯, 1941.  
原 覺天, 『現代アジア研究成立史論』, 勁草書房, 1984.  
\_\_\_\_\_, 『滿鐵調査部とアジア』, 世界書院, 1986.

## 논문·잡지

加茂正雄, 「朝鮮の資源を開發せよ」,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26.  
小山一徳, 「朝鮮に於ける陶磁器業の産業的地位と斯業の振興策」, 『朝鮮經濟雜誌』122, 京城城商業 會議所, 1926. 2.  
中吉功, 「朝鮮の二つの美術館」, 『朝鮮美術への道』, 國書刊行會, 1979.  
三山喜三郎, 「中央試験所の施設及研究」, 『朝鮮一産業開發號』, 朝鮮總督府, 1922. 10.  
\_\_\_\_\_, 「朝鮮の工業試験成績」, 『朝鮮及滿洲』, 朝鮮總督府, 1929.  
梁波, 「植民地科學と滿鐵中央試験所」, 『東瀛求索』12, 2001.  
安東赫, 「長期戰の代用品」, 『朝鮮行政』,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8. 8.  
山村銳吉, 「朝鮮資源の特性と工業の飛躍」, 『朝鮮』, 朝鮮總督府, 1936. 1.  
\_\_\_\_\_, 「代用品工業に就て」, 『朝鮮』, 朝鮮總督府, 1936. 1.  
\_\_\_\_\_, 「中央試験所の活躍と朝鮮工業」, 『朝鮮商工獎勵官報』, 朝鮮商品調査研究會, 1938. 4.  
宇垣日成, 「朝鮮統治に就いて」, 『朝鮮總覽』, 朝鮮總督府, 1933.  
徳家藤榮, 「中央試験所問題に就て」,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京城商工會議所, 1932. 7.  
「第八章-産業」, 『朝鮮彙報』, 1915. 9.  
「朝鮮に於ける工業生産品」, 『朝鮮經濟雜誌』108, 京城商業會議所, 1924. 12.  
「中央試験所主催の工業懇談會」, 『京城商工會議所經濟月報』, 京城商工會議所, 1933. 5.  
「朝鮮工業發達の基礎工作工として業試験機關擴充に關する要望」, 『朝鮮工業協會報』, 朝鮮工業會議, 1935. 5.  
「第四十九回研究例會代用品する批判研究座談會」, 『朝鮮商工獎勵官報』57, 朝鮮商工會議所, 1938. 8.

## 정부기록문서

- 朝鮮輸出工藝協會,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ニ關スル件」, 1939. 7. 4.  
\_\_\_\_\_, 「朝鮮ニ於ケル陶磁工藝振興保存ニ關スル協議會開催ノ件」, 1942. 6. 27.  
\_\_\_\_\_,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ニ關スル件」, 1942. 7. 6.  
\_\_\_\_\_, 「朝鮮陶磁工藝振興保存ニ關スル件」, 1942. 7. 8.

## 보고서

- 小山一徳, 「朝鮮ニ於ける陶磁器業を如何にすべけれ」, 『朝鮮商工獎勵官報』12, 朝鮮商工會議所, 1934. 12.  
森勇三郎, 「朝鮮陶磁器業調査」,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11, 朝鮮總督府, 1915. 3.  
佐野千一·山崎亨, 「窯業原料調査報告第八報」,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17-6, 朝鮮總督府, 1937.  
山崎亨·山田義雄, 「窯業原料調査第三報大同陶石調査報告」,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6-4, 朝鮮總督府, 1936.  
山崎亨, 「朝鮮産窯業原料調査概要」,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15, 朝鮮總督府, 1934.  
大橋武夫·吉田寛一郎, 「驪州磁器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3-1, 朝鮮總督府, 1932.  
大橋武夫·千葉正章, 「平壤磁器試驗」,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書』13-1, 朝鮮總督府, 1932-1933.  
海福紀一, 「朝鮮ニ於ける新設陶磁器工場」,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10, 朝鮮總督府, 1919. 3.  
\_\_\_\_\_, 「朝鮮陶磁器業調査-朝鮮ニ於ケル陶磁器ノ分類」,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1-11, 朝鮮總督府, 1915.

## 연보

-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所員ノ出張」,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1939.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16-1920·1921-1928.  
朝鮮總督府, 「陶磁器の改良實地指導」,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年報』, 1930.  
東京工業試驗所, 『東京工業試驗所年報』, 1933.

## 그 외

- 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 :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Univ of Washington Press, 1996.

## 국문초록

본고는 일제강점기의 도자산업 및 공예가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연구·조사기관인 관립 중앙시험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도자가 일제가 추진한 제반 정책의 시행 및 요구에 따라 제작구조가 재편되었다는 관점에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협력한 중앙시험소의 운영시기를 제1기(1910-1919), 제2기(1920-1929), 제3기(1930-1936), 제4기(1937-1945)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립 초창기부터 시험소 요업부를 통해 도자정책에 필요한 제반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시국에 부합되는 업무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10년대부터 실시된 도자원료조사와 연구는 당대는 물론 이후 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과 전통 영역의 製陶 기술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반면, 이 과정들을 통해 조선의 자원 및 노동력 수탈이 동시에 감행되었던 것도 이 시기에 대두된 필연적인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양립체계가 가능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일제가 자국 도자산업에의 기여를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착취를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기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단정 짓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아마도 중앙시험소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의 양립론을 타올 시킬만한 사례로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점 직후, 일제는 식민통치를 일종의 개혁(reformation)이라는 말로 일컬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시험소를 설립시켰다. 도자산업의 경우, 시험소의 시행안이 바탕이 되어 식민 치하에서도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결과적으로 근대적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하더라도 수탈을 주목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들이 조선의 도자산업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시기에 시험소가 제출한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별 영향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 **Abstract**

# **Ceramics Industry Policy of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Eom Seung-hui\***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a ceramics industry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at governed Korea during the earlier part of the 20<sup>th</sup> century. The study focuses on its organization, created to determine key issues facing the Korean ceramics industry and craft as well as structural currents thereof, to understand how the structure of ceramics production in Korea was realig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ccording to the policy demands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to examine how the ceramics industry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evolved over time, I divided the thirty-five years of existence of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the industry research organization providing policy support to the colonial authority, into four phases: 1910-1919 (Phase I), 1920-1929 (Phase II), 1930-1936 (Phase III), 1937-1945 (Phase IV).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Ceramics Industry Station of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conducted a comprehensive range of activities to support the ceramics industry policy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since its very inception, and in subsequent periods, performed other tasks required by the shifting focus of the latter's policy

---

\* Lecture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and changing industry environment. Ceramics materials research, conducted since the 1910s, in particular, appears to have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industry both at that time an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reafter.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also seems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a stable transition of the industry from a production model based on traditional pottery-making techniques to one driven by modern techniques. This modernization of the ceramics industry, however, was accompanied by a generalized phenomenon of exploitation of Joseon's resources and labor force for Japanese interest. These two different effects produced by the ceramics industry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its aim was from the outset to more effectively exploit the Korean ceramics industry, in a manner to benefit the Japanese ceramics industry.

Notwithstanding, a clear-cut assessment of the historical role of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is far from easy. The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is, as a matter of fact, a case in point of how double-edged Japan's general colonial policy was in Korea; seemingly aimed at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the colony," but having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the colony," at the same time. Soon after it took control over Korea, Japan started to call its colonial rule "reform" establishing the Central Laboratory as a means to support the so-called reform initiative. The ceramics industry, for instance, was led onto the path of modernization according to the roadmap drawn up by the Central Laboratory. However, this reform initiative, even as it brought about modernization and growth, had little directly beneficial effect on the Korean ceramics industry, the ultimate goal of such policy being exploitation. Future research should perform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Laboratory's ceramics industry policy by region, by analyzing the vast body of research reports produced by the latter.